


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

 추진부서 |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☎ 031-590-7310
남양주시 기업지원과 ☎ 031-590-2736
남양주시 건축과 ☎ 031-590-1384

개선배경



-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을 시행중임
 - 관련 매뉴얼에는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'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'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득하려면,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"기숙사·숙소"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작성 시 용도란에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"영") 별표 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따른 용도를 적고,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,
 - 영 [별표 1]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[별표 1]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괄호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영 [별표 1] 17. 공장의 부속용도(하위 목)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(숙소)와 가장 유사한 용도(구체적인 명칭)를 기재할 수 없어,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이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

[피해 사례]

- 사업주 A는 금속 정밀 공업 부품을 제작·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체로, 내국인 인력수급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절실하여,
-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,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비(기업환경 개선사업)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,
-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(‘용도’에 ‘기숙사’ 표기)를 하지 못해,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하여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 발생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“기숙사·숙소”로 기재되지 않으면 불법 가설건축물로 간주되어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음.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을 어렵게 해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



개선 후

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·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, 현황도(평면도)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
- 실제 현황도에 표기된 내용대로 건축물이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허가권자(지자체장)의 확인이 있는 경우,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

※ 고용노동부 회신('23.9.11)에 따라,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기숙사가 기재가 있는 경우, 기재사항 변경 없이 담당자 확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

추진과정



- '22.6.30. / 8.2.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개정 건의 (市 → 국토부)
-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17. 공장에 기숙사·숙소를 건축물 부속용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추가
- '23.3.29. 중소기업 결림돌 규제 현장간담회 개최
- (道) 규제개혁과, (市) 기업지원과, 법무담당관, 관련 기업
- '23.4.19. 기숙사·숙소 규정 합리화 (道 → 고용노동부, 국토부) 건의
- '23.5.15. 기숙사·숙소 규정 합리화 (市 법무담당관 → 고용노동부)
-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·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, 현황도(평면도)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

개선효과



- 2개월('23. 8~9월) 간,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**7개 기업 기숙사(숙소)인정,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완**
-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
-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부담 경감